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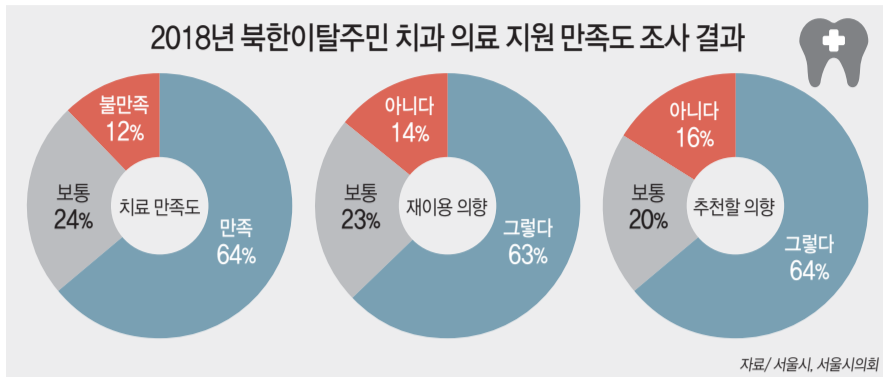
“북한 이탈주민 취·창업 지원 없어… 지속적 일자리 교육 필요”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정착조사 기초생활·건강증진 위주 지원 정책 수혜자에 맞게 개선 요구

서울시가 새터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을 정책 수혜자의 요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일 남북하나재단이 지난해 공개한 ‘2018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 조사’에 따르면 탈북민들은 더 나은 남한 생활을 위해서는 ‘취·창업 지원’(24.9%)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답했다. 의료 지원(17.8%), 교육 지원(13.7%)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북한이탈주민 정착 시비 지원 사업은 신규전업자 행사, 기초생활물품 지원, 건강증진 사업으로 취·창업 지원 관



련 사업은 없다”며 “취·창업 지원과 함께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 ▲직업 능력 신장을 위한 지속적인 일자리 교육 ▲북한 이탈주민의 성비를 고려한 여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마련 ▲취업 성공 이후 실업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등을 주문했다.

지난해 서울시 예산 현황을 보면 북한이탈주민이 지원 우선 순위로 꼽은

상위 3개 항목 중 2순위인 의료 지원에 대한 예산 3억6464만원만 편성됐다. 시는 예산의 92.7%인 3억3811만2000원을 무료 치과 진료실을 운영하는 데 썼고 나머지 2652만8000원(7.3%)은 건강 증진 사업에 사용했다.

2018년 대한구강보건학회지에 실린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구강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효과’ 논문에 따르면 하나원에 입소한 탈북민의 96.9%가 치주(잇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탈북민 10명 중 9명이 치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지만 관련 예산은 3년째 제자리 수준이다. 서울시의 ‘최근 3년간 무료 치과 진료실 예산 및 지원 내역’ 자료를 보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치과 진료 예산은 2016년부터 3억3800만원으로 묶여 있는 상태다.

본인 부담의 추가 비용을 내지 못해 치과 치료를 중도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 지원액을 제외한 추가비용을 지불하지 못해 2016~2018년 총 60명이 치과 치료를 중간에 관했다. 치과 치료 지원 대상자는 사업 시행 첫해 204명에서 2018년 107명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치과 의료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도 낮았다. 시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사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족도는 16%포인트, 재이용 의향은 31%포인트, 추천할 의향은 32%포인트 하락했다.

시의회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정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참고해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치과 의료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중도 포기자의 유형을 분류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치료비 추가 지원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에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은 2016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 거주 탈북민은 2016년 6812명에서 2017년 6905명, 2018년 6966명, 2019년 7020명으로 4년간 3.05%(208명) 증가했다. 반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예산(시비)은 2016년 5억4420만원에서 2017년 5억2220만원으로 4.04%(2200만원) 감소한 후 2019년까지 3년간 동결됐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조기 폐장된 스키이트장 2일 서울광장 스키이트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폐렴’으로 인한 조기 폐장 소식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내 中企 해외진출 ‘비상’... 일정 취소 줄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해외 시장개척단 행사 취소·연기 기업 모집공고 중단하고 사태 파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경기도 중·소·신생 기업들의 해외 시장 개척도 어려움을 겪게 됐다.

도내 각 지자체가 지역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동남아시아 시장진출을 지원하는 시장개척단 활동을 취소하거나 하반기로 연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2월 10~14일 관내 4개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중인 대만·베트남 수출개척단 행사를 취소했다고 2일 밝혔다. 수출개척단은 신생 기업이나 창업기업에 시장개척의 발판이 되는 중요한 행사다.

단독으로 해외 시장 진출 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지자체가 항공료와 상담장임차료, 통역원, 현지 교통편, 시장조사, 바이어 미팅 등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올해 첫 시장개척단인 대만·베트남 행사를 취소한데 이어 3월의 베트남·미얀마, 4월의 하노이박람회도 모두 취소했다.

수원시 국제통상팀 관계자는 “시장개척단 취소 내용의 공문을 참여 기업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수원지역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하자 2일 오후 경기 수원역 인근에 위치한 중국인 거리에서 수원 팔달구 보건소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에 전달하면서 양해를 구했더니 기업마다 무척 아쉬워했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5월 11~16일 예정된 싱가포르·미얀마 시장개척단을 추진할지 여부를 고민중이다.

당초 2월에 참여 기업 모집공고를 낼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3월 말까지 바이러스 종식 여부를 지켜본 뒤 일정을 올 하반기로 연기한다는 방침이다.

성남시도 3월 9~14일 일정의 베트남 시장개척단을 하반기로 연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올 3월부터 6월까지 중국에서 열리는 각종 박람회의 연기 여부를 신중히 검토중이다.

이미 3월 1~4일 제30회 중국화동수출입상품교역회는 연기가 확정됐고, 제54회 광주주 국제 미용 박람회(3월 10~12일), 길림성 수입상품전(4월 3~12일), 제31회 하얼빈 국제경제무역박람회(6월 15~19일) 등 9개 주요 박람회도 전시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도 올해부터 중국 산동성과 강화하려던 경제교류에 차질이 생겼다.

지난해 12월 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산동성 공업신식화청과 기업 간 교류를 정례화하고 양측의 경제교류를 가속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올 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생각이었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사전절차 조기완료... ‘옥정~포천 철도’ 눈앞”

경기도 타당성평가·기본계획 수립 2021년 상반기 기본계획 확정 목표

경기북동부 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이 오는 2028년 개통을 위한 청사진 그리기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옥정~포천 광역철도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돌입했다고 2일 밝혔다.

7호선 연장사업의 일환인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은 총 1조 1762억원을 투입해 양주 옥정신도시에서 소흘읍,

대진대, 포천까지 정거장 4곳(포천 3곳, 양주 1곳)과 차량기지를 포함한 총 17.45km의 구간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데 이어 1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는 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다.

특히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협조로 계약심사, 건설기술심의, 계약심의 등의 사전절차가 조기에 완료됐다.

/경기=박완희 기자 wanhee@

서울시, 빗물저금통 설치비 90% 지원

서울시는 빗물을 저장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 ‘빗물저금통’ 설치비의 90%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빗물저금통은 지붕 등에 내린 빗물을 저장 탱크에 모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저장된 빗물은 조경용수나 청소용수 등으로 사용된다.

시는 올해 예산 4억400만원을 배정해 소형시설 100곳, 학교·공동주택 10곳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형시설에는

최대 200만원, 학교·공동주택은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희망자는 신청서류를 작성해 3일부터 해당 자치구(소형 빗물이용시설)나 서울시(학교 및 공동주택)로 접수하면 된다.

소형 빗물이용시설은 자치구에서 적합성을 검토한 후 서울시에서 지원대상을 확정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마곡지구에 신재생에너지 기반 ‘4세대 난방’ 도입

차세대 지역난방 실증 사업 실시

서울시는 마곡지구에서 신재생에너지와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4세대) 지역난방 실증 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4세대 난방은 저온수를 사용해 누출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3세대는 100도 내외의 고온수를 사용하는

데 4세대 온수는 40~70도 수준이다. 건축 단열 기술과 자재 성능 향상으로 신축 건물은 열 손실이 적어 저온수도 난방이 가능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4세대 난방은 ‘양방향 열 거래’가 가능하다는 특징도 있다. 3세대까지는 생산자가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열을 공급했다.

시는 4세대 지역난방에 ‘스마트 열

그리드’를 구축한다. 전력망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을 적용해 난방열 공급·사용 정보를 실시간 수집한다. 생산자는 난방열 사용 현황을 파악해 열 생산을 조절할 수 있고, 이용자는 남은 열을 판매할 수 있다.

시는 연료 사용량을 줄여 온실가스과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현정 기자